

# 기업 구조조정 범정부협의체 5개월만에 재가동

지정한 5개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집중할 전망

더민주·국민의당 '동의' 입장... 작업 가속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5개월만에 재가동된다.

당초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은 나타내온 이당이 총선 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쪽으로 입장은 신회하며 부실기업을 수출대에 올리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범정부협의체는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범정부협의체는 기업 구조조정의 소집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산업을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했다.

당시 구조적 공급망이 상태에 있는 철강 업종의 합금철 분야, 석유화학 업종의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해운 업종의 부정기선·연근해 정기선 등에 대한 설비 김축과 자물적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놨다.

3차 회의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등의 문제로 구

조정 작업이 한동안 지체 돼온 만큼 기존 취약업종 내에서 실릴 기업은 살리고 포기할 기업은 포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시장 점검 차원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위험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추가로 취약업종에 포함 시킬 신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차 회의에서는 기준에 지정한 5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일정에 맞춰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당의 입장 변화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종합기적 성장·경제력 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종합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외환위기(IMF) 때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되면서 안 되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역시 "미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은 파악해온 이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의 진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권은행들은 4~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대상을 가려낸다.

한편 지난 2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준 4대 부문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에 산업개혁을 더해 4+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는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연진수 기자

## 제2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대출 이후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등에 이어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내규에도 전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까지 제2금융권에서 대출자 신용을 금리인상에 반영하고 있는 회사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신용·개인대출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출자에게 통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개선된 대출자에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제2금융권 159개 금융회사 가운데 내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곳은 모두 151곳으로 전체의 95%에 이른다.

이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여전시와 차주의 신용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만 취급하는 보험사 등을 제외한 것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여전사 6곳과 보험사 2곳의 내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뒤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예컨대 가계대출은 직장·변동·승진·신용등급 개선·소득 증가 등,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 등의 시유가 있으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간 행시회수는 2회로 제한을 두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도입실적이 미흡한 회사는 이행계획을 제출도록 할 것"이라며 "상품안내과 대출연장 사전통지를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진수 기자

## 상장사 4곳 중 1곳, 지난해 이자도 못갚아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은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상장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집적 상태거나 부채비율이 1000%를 웃드는 '초고위험' 기업으로 조사됐다.

재벌닷컴이 21일 금융사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 17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미만(별도 기준 재무제표)인 기업이 450곳(26.2%)으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는 뜻이다. 사실상 영업활동으로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았다는 얘기다.

자산 상위 30대 그룹 소속 28개 상장사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종합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현대로템, IC전자, 한진해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었다.

부채비율이 200%를 웃드는 기업은 135곳으로 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이에 자본이 잡식됐거나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초고위험' 기업이었다.

동부제철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8800%로 가장 높았다. 대우조선해양(7308%)과 세하(4990%), 넥솔루션(3156%)도 재무위험 기업으로 분류됐다. 체권단 자율협약 대상인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개별 기준으로 1565%였다.

이밖에 현대시멘트(1531%), 태양기전(1362%), STX(1362%), 플레이워드(1312%), STX중공업(1287%), GS인스루트루먼트(1097%), 삼보산업(1056%)도 부채비율이 1000%를 넘었다. /연진수 기자

## 항공기 늘어날때마다 종합심사

### 정부, 전문인력·적정장비기준 제시

앞으로 항공사가 운항 개시를 할 때마다 받던 종합심사를 보유 항공기가 일정 규모에 도달할 때마다 받게 된다.

운항 규모에 걸맞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 기준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는 2005년 최초 취항한 이래 현재 제주항공(28대), 진에어(20대), 에어부산(14대), 이스타(15대), 티웨이(13대), 에어인천(2대)이 운영 중이다.

저비용 항공사의 여객운송 실적은 해마다 2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전 관련 조직·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됐다.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나타내는 항공안전점수가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안전장애가 전년대비 94%나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항공사가 최초 운항을 시작할 때마다 받았던 운항 종별 종합심사를 항공기가 일정 규모에 도달할 때마다 받게 된다.

또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는 항공기 1대당 12명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전·후 정비의 경우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연진수 기자

국내·수입차 25개 브랜드 참가

## 부산국제모터쇼 6월 2일 개막

격년으로 치러지는 부산국제모터쇼가 국내 및 수입차업체 등 25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6월에 열린다.

부산시와 베스코(BEXCO), 한국자동차 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차동자협회(KAIDA) 등 6개 주최·주관기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 부산국제모터쇼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터쇼는 미래의 물결 갑동의 기술(Future wave, inspiring technology)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일 프레스케이트를 시작해 같은 달 12일까지 11일간 부산 해운대 베스코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국내·외 완성차 25개 브랜드와 부품

및 용품 등 관련 업체 100여곳이 참가해 230여대의 최신 차량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벤틀리, 만트릭, 아미하 등을 올해 처음으로 부산모터쇼를 찾는다. 참여 업체는 2014년보다 14% 늘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5개 승용차 브랜드 및 현대상용차, 기아상용차 등 총 7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아우디, 벤틀리, BMW, 캐딜락, 포드,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렉서스, 링컨, 미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뉴산, 토요타, 폭스바겐 등 16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이 밖에 상용 브랜드인 만트릭과 이륜차 아미하도 참가한다. /연진수 기자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